

# 여야, 4차 추경 추석 전 처리할까... '통신비 2만원' 쟁점

### 與, 오는 18일께 추경안 심사 마무리 처리 계획 野 "통신비 2만원 지급은 통신사에 1조 주는 셈" 예결위 與 간사 "통신비, 4차 추경에 가장 부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을 높였으나 통신비 지급 등 세부적 안건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침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이번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대표 오찬 회동에서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이 '통신비 지급' 등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며 시작부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사실상 통신사에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독감 백신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추경이라는 점도 야당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 협의에 임하며 조속

심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며 칼날 검증도 베풀고 있다.

7월 3차 추경 처리 당시 176석을 가진 여당과의 체급 차이를 절감했던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 협조는 하되 '통신비 2만원 지급'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안에는 공세를 펼치며 정부 여당에 흡집을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추미에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 등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일 거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통신비 공세등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여론 환기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설훈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2만원이 돈이냐는 분노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며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민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 의지 만큼은 분명히 하며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려면 이번주 안에, 오는 18일께는 4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14일부터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현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여야는 대표 간 회동에서 협치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긴 했지만, 야당이 그 속도를 맞추지 않을 경우 여당이 3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 4차 추경의 기본 방향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다. 다른 것을 대신해 넣고 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원호기자

## 소병철 의원, 수공 측에 주민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측에 이번 섬진강변(순천시 황전면과 구례군 등) 홍수 피해를 확대한 수공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홍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댐 건설 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홍수조절 관련 고시를 기후변화에 맞게 수정할 것, 그리고 ▲전례 없는 기록적 폭우를 경험한 만큼 폭우 및 태풍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재검점

할 것도 요청했다. 수공 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수공 예산 중 지역협력금과 임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가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지급을 하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책이 마련되고 요청사항들이 확실하게 관철될 때까지 수공 측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에도 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원호기자

## '드루와특위' 김기현 "靑-與-포털 커넥션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이 운영한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논란으로 촉발된 '포털 뉴스 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데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카카오톡 문자가 '드루킹 사건'에 버금가는 여론·뉴스 조작 시도로 보고 있다. 네이버 임원인던 윤 의원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된 이력도 주목, 현 정부 들어 포털 뉴스 관련 조작은 물론 앞선 드루킹 사건에 윤 의원이 연관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포털 뉴스 조작 증거가 포착됐다고 보고 '포털 조작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여론이 관심을 기울일 때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포털조작대책특위는 '카카오톡' 들어오라는 윤 의원의 문자 내용과 드루킹 사건과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드루와 포털게이트 특위(이하 드루와 특위)'라는 다른 이름도 붙였다.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드루와특위는 14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가운데 앞서 김기현 드루와특위 위원장은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카카오톡 문자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댓글 조작을 통한 국민 여론 조작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여론 조작을 진두지휘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개연성이 확인된 만큼 그 커넥션을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드루와특위 활동과 관련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책임 규명부터 단계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실실을 찾아 윤 의원을 과방위원

"운영찬 문자 노골적 여론 조작" "포털 불러 편집권 통제 시도해" "드루킹 사건 개입 개연성 검토"

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행사 고발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명과 사과를 했고, 포털 개입에 대한 구체적 정황 없이 보좌진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행사 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름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윤 의원의 갑질 의식과 행위의 위법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포털을 불러 편집권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 한 의도가 분명했고, 본인도 사과를 통해 오히려 그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법성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에 당시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드루킹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내용 가운데 '네이버 임원 중 김경수의 정보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는 문장이 등장한다는 점이 그 근거다. 뉴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